野3당, 이태원 국조특위 일정·증인 단독의결

이상민 행안부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89명
오세훈 시장·박희영 구청장 포함…한총리 제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9일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현장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이번 달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 보고 대상이다.

89명의 기관 증인도 야당은 단독으로 일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을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여당 측 불참을 질타하며, 증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관 증인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에 오늘 오지 못한다는 명분을 갖고 계신 것은 알겠으나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면서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 즉각 해임하라"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 일동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장 종사자에게 연말 선물로 우리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선물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올해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해 많은 농민들이 눈물을 흘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수입 농산물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우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인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도 행정안전부가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농민의 마음을 조금만 신경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이어,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로 연이어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이상민 장관의 즉각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여야, 예산안 협상 팽팽한 대치 지속

與 "5억에 발목" vs 野 "윤심 종속당"
일부 대안 모색 조짐속 수 싸움 치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물밑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오가는 흐름도 감지되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측의 수 싸움이 치열해 속도감 있게 실마리를 찾아낼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양대 쟁점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으로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남은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5억 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냐"면서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하고),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與, 전대 룰 '당원투표 100%'로 개정

비대위 의결…20일 상임전국위·23일 전국위 열어 개정 완료

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 지도부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등 3차례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이번 주 안에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내년 3월 초 전당대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내년 1월 초 후보 등록을 받는 등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선 안 된다"며 "소극적, 일시적 행위인 여론조사는 자발적, 적극적 행위인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책임당원 수가 약 80만 명이다.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졌다.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이 된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하고, 집권여당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고민할 문제는 유권자의 자격이 아니다. 오히려 후보의 자격,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우리 당의 지상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대통령 후보 경선과 공직선거 후보 경선 등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 /연합뉴스